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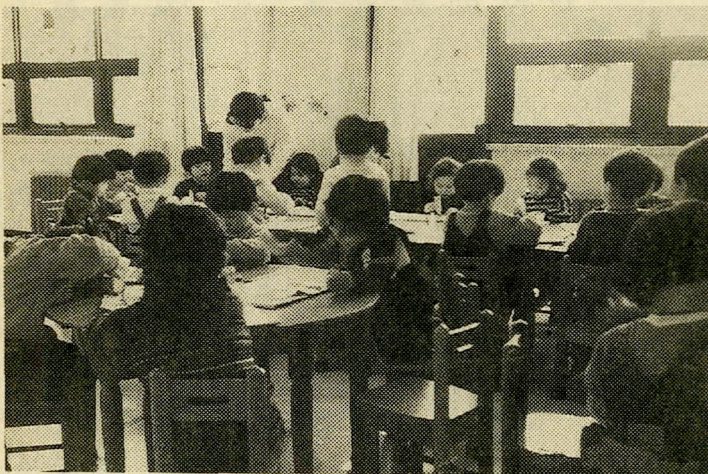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에 정부의 탁아사업지원책이 뚜렷이 명시되었지만, 양자소득층 자녀를 돌보아온 여성단체의 시범탁아소와 새마을유아원 비영리민간탁아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반기에 시행될 다관립 영유아보육법은 지금까지 노동부 내부부서에 산재해 있던 탁아행정을 보사부로 일원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노동부 내부부가 지원해오던 탁아사업의 책임정체가 뚜렷하지 않아 비롯되는 업무이관의 공백으로 인해 기존의 재정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와 여성단체와 탁아인부를 병행하고 있는 새마을유아원이다.

대한YWCA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仁川과 京畿도 城南市, 釜山 등 3개 지역에서 시범탁아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말까지 全州馬山 등 11개 지역에 탁아소를 완공할 계획인데 노동부는 그동안 Y가 부지를 마련하면 건축비일부와 1개소당 영유아운영비의 절반정도인 5천만원을 지원해왔다.

한국부인회도 현재 서울 시松坡구청의 지원을 받아

탁아사업 政府지원에 허점



영유아법 책임규정 명시 안돼 기존補助 끝길판... 재정난 심화

「저소득층托兒문제 대처모임」 내달 발족

운영하는 유아원 개소가 의예도 노동부의 지원으로 급증 중 江原太田과 慶南 三千浦시에 시범탁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탁아영유아를 하는 새마을유아원도 현재 영세지역의 경우 운영비의 80%까지 내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교육할 책임이 있다(제3조)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8조1항)고만 표현, 탁아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책임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제23조에서도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조항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YWCA 車敬愛간사는 이번 영유아보육법에서 탁아행정이 보사부로 일원화되면서 타 부서의 기존탁아지원문제는 명시되지 않아 업무이관과정에서 재정지원에 공백이 생길까봐 걱정이 라며 특히 보사부가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노동부 사업을 지속할지 의문이 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사부측은 이에 대해 「급변까지는 각 부처마다 탁아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중 새로 마련된 영유아보육법에 정부의 탁아지원책이 명시되었지만, 양자소득층 자녀를 돌보아온 여성단체의 시범탁아소와 새마을유아원 비영리민간탁아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반기에 시행될 다관립 영유아보육법은 지금까지 노동부 내부부서에 산재해 있던 탁아행정을 보사부로 일원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노동부 내부부가 지원해오던 탁아사업의 책임정체가 뚜렷하지 않아 비롯되는 업무이관의 공백으로 인해 기존의 재정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와 여성단체와 탁아인부를 병행하고 있는 새마을유아원이다.

대한YWCA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仁川과 京畿도 城南市, 釜山 등 3개 지역에서 시범탁아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말까지 全州馬山 등 11개 지역에 탁아소를 완공할 계획인데 노동부는 그동안 Y가 부지를 마련하면 건축비일부와 1개소당 영유아운영비의 절반정도인 5천만원을 지원해왔다.

한국부인회도 현재 서울 시松坡구청의 지원을 받아

〈李英伊기자〉